

# 현안과 과제

■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목 차

## ■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Executive Summary .....	i
1. 개요 .....	1
2. 최근 미국의 핵심 경제 이슈 .....	2
3.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주요 공약 .....	6
4.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10
5. 시사점 .....	13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관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경 제 연 구 실   :   홍 준 표 연 구 위 원 외 (2072-6214, jphong@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요 약 >

#### ■ 개요

2016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제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ke America Great Again)'란 슬로건을 내세워 미국이 우선이고 내국인의 일자리를 되찾아 미국을 빠르게 재건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어 대선 공약을 분석 후 미국 경제의 향방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 최근 미국의 핵심 경제 이슈

먼저, 최근 미국의 핵심 경제 이슈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경기 활성화) 미국의 중장기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산층 복원과 노후한 인프라 투자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을 지탱하는 중산층의 비중이 1971년 61%에서 2015년 50%로 감소하고 있어 중산층 복원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노후한 인프라는 향후 경제적 손실을 크게 발생시켜 중장기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부문) 리쇼어링 정책으로 제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TPP 체결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있다.** 오바마 2기 정부부터 국내회귀기업(Reshoring)에 대한 법인세 인하,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본국으로 회귀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다만, TPP가 체결된다면 서비스업의 수혜가 예상되나 제조업은 타격이 우려된다.

**(무역적자 지속) 對중국 대규모 무역적자에 대한 비판과 이를 개선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무역적자는 2015년 -7,526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인 2006년 -8,373억 달러에 근접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적자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했다. 이에 미국은 환율 조작국 지정, 반덤핑 관세 등을 통해 중국 등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특정 국가들을 견제하고 있다.

**(의료비 지출 부담) 중산층의 의료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 규모가 2013년 8,713달러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이 중 공공의료지출이 48%에 불과해 의료비 지원이 부족하다.

**(재정적자 확대) 미국 정부의 공공부채와 재정적자는 다시 확대되고 있다.** 2010년

대 들어 미국의 공공부채는 10조 달러를 넘어섰고 2016년에는 14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줄어들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2016년에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주요 공약

다음으로, 미국이 당면한 이러한 경제적 이슈들을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을 통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경제 정책) 트럼프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그 동안 아웃소싱 및 불법체류자 유입 등에 의한 잃어버린 일자리도 되찾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낙후된 도시 기반 시설 강화를 약속했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생산 규제 완화를 통한 추가 세수와 민간 자본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무역 및 에너지 정책)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등의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고, 화석 연료 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했으며,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시사했다. 또한 약 50조 달러로 추정되는 셰일가스 및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해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꾀할 것이다.

**(세계 및 금융산업 정책) 세계정책 공약 중에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 폐지 등의 감세, 금융산업 정책 공약으로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핵심**이다. 소득세율 적용 구간을 간소화하고 세율을 인하하며, 상속세 등 주요 세금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법인세율은 35%에서 15%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드-프랭크법이 금융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면서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기타 정책) 불법체류자를 배척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복지 및 의료 측면에서는 미국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오바마케어 폐지를 주장**했다. 멕시코 접경 지역에 장벽을 건설하고, 이민심사에서 사상 검증 실시, 비자법 강화 등을 통한 반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오바마케어가 지속되면 향후 재정 부담이 심해져 이를 폐지하고, 대신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낮추고 건강보험 시장이 자율경쟁체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집권기에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투자 확대, 법인세 인하로 인한 리쇼어링 유도, 이민 제한 등으로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의 감세 대비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적자는 크게 확대되고 보호무역 강화와 이민 통제 등의 고립 정책 시행으로 경제가 둔화될 것이다. **무디스(Moody's)**는 도널드 트럼프의 모든 공약을 시행할 경우, 집권기 동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6% 성장이 예상되며, 이는 현재 정책 유지시의 2.3%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국내 경제는 단기에는 인프라 시장 참여 가능 및 미국 경제 성장세 확대의 수혜를 입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르는 수출 부진으로 부정적인 파급 영향이 예상된다.**

<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대선 공약	미국 경제 파급 영향	한국 경제 파급 영향	종합평가
일자리 창출	- 인프라 부문 일자리 창출 - 단기적으로 경제 활성화	- 미국의 소비재, 자본재 수요 증가로 한국의 수출 증가	+
인프라 투자		- 미국의 정부조달시장 참여 기회의 제한적 확대	▲
통상 정책	- 보호무역주의 강화 - 중국 견제 - 달러화 약세 용인	- 통상 마찰 증가 - 한국의 對美 직접 수출, 우회수출 경로 모두 부정적 - 달러 대비 원화 강세에 따르는 수출 경쟁력 약화	-
에너지 정책	- 유가 상승세 완화 혹은 하락 - 미국 우선주의로 중동 산유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용인	- 경상수지 흑자세 지속 - 유가(변동성) 리스크 확대	▲
세제 개편	- 산업경쟁력 강화	- 산업 경쟁구조 심화 - 국내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 위협 가능성 상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는 긍정적, -는 부정적, ▲는 중립적을 의미.

■ 시사점

트럼프의 공약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에 의문점이 있어 과도한 우려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 향후 공약 이행 정도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당선된 이상 미국 우선주의 및 고립주의를 내세운 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 각 부문에 차별화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첫째**,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와 수요확대에 대비하여 미국 시장에 보다 적극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 확대에 대비하고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미국과의 통상 마찰 리스크 및 한미FTA 재검토·재협상에 대비하여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 1. 개요

- 2016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제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
  -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ke America Great again)’란 슬로건을 내세워 미국의 재건을 강조
    - 희망적인 미국의 미래를 만들고, 내국인 일자리를 되찾아 빠르게 미국을 재건할 것으로 강조
  - 도널드 트럼프는 총 선거인단 총 538명 가운데 290명을 확보하면서 45대 대통령으로 당선
  - 향후 일정은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출과 의회 승인을 거쳐 2017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 2016년 12월 19일 선거인단 투표 → 선거인단 투표 집계 및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 공식발표 → 2017년 1월 20일 대통령과 부통령 취임
- 이에 본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공약을 분석 후 미국 경제의 향방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미국 역대대통령 정권 시기 >

대선	대통령	정당	평균 성장률
1976	지미카터	민주당	3.3
1980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3.2
1984	로널드 레이건		3.9
1988	조지 HW부시	공화당	2.3
1992	빌 클린턴	민주당	3.3
1996	빌 클린턴		4.5
2000	조지 W 부시	공화당	2.4
2004	조지 W부시		1.9
2008	버락 오바마	민주당	0.9
2012	버락 오바마		2.2('13-'15)
2016	도널드 트럼프		?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투표 결과 >



자료 : CNN.

## 2. 최근 미국의 핵심 경제 이슈

○ (경기 활성화) 미국의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중산층 복원과 노후한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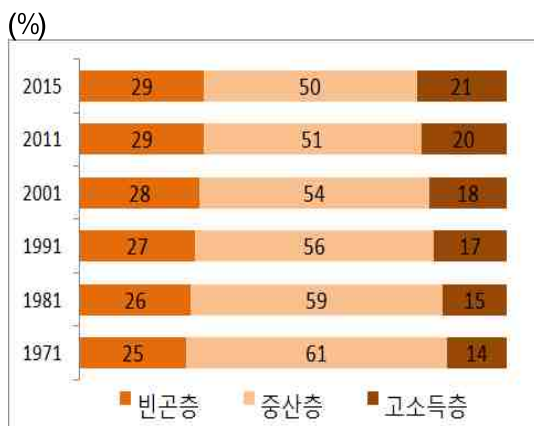
-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

- 미국의 중산층 비중이 1971년 61%에서 2015년 50%로 11%p 감소
- 동기간 빈곤층과 고소득층 비중은 늘었지만, 고소득층은 7%p 늘어나면서 빈곤층 4%p보다 크게 확대

- 미국의 노후한 인프라는 중장기적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 미국 토목공학회(ASCE)가 4년마다 실시하는 평가에서 2013년 기준 미국 전체 인프라 등급은 'A~F' 중 D+를 기록하였고, 2020년까지 3.6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요구된다고 발표
- 인프라 갭(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예산과 실제 확보 예산)이 확대될 경우 2025년까지 GDP의 4조 달러, 기업 매출의 7조 달러 손실과 약 250만개 일자리 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sup>1)</sup>

< 미국 중산층 비중 추이 >



자료 : Pew Research Center.  
주 : 소득그룹에 따른 성인의 비중.

< 미국 인프라 평가 결과 (2013년 기준) >

평가항목	점수	평가항목	점수
에너지	D+	수로	D-
교통	D	폐수	D
항구	C	유해폐기물	D
항공	D	공원 등	C-
제방	D-	철도	C+
댐	D	교량	C+
학교	D	고형폐기물	B-
도로	D	식수	D

자료 :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2013 Report Card for America's Infrastructure.

1)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To Failure to Act : Closing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Gap for America's Economic Future, 2016.

○ (제조업 부문) 리쇼어링 기업의 증가로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TPP체결은 미국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 예상

- 최근 해외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본국으로 회귀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면서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 정부 2기부터 기업의 세금 제도 개편으로 리쇼어링 기업의 법인세 인하, 본국 이전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등 혜택 제공
  - 2000~2003년간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이 많아 연평균 22만개의 일자리 손실이 있었으나 최근 국내 회귀 기업 증가와 외국인 투자 유지 등으로 일자리 손실이 0으로 전환
  - 이에 오프쇼어링 기업보다 리쇼어링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일 자리를 창출해 경제성장 요인으로 활용

< 미국의 리쇼어링(Reshoring)과 외국인투자금유입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수 효과 >  
(단위 : 일자리 수, %)

구분	2000~2003 연간 평균	2015	증감율
신규 리쇼어링과 외국인투자	~12,000*	67,000**	+ 400%
신규 오프쇼어링	~240,000*	60,000*	- 75%
순 일자리 증감	~-220,000	~+0	-

자료 : Reshoring Initiative.

주 : \* 는 추정치, \*\*는 Reshoring Library through Dec 31, 2015에서 계산.

- TPP가 체결되면 서비스업 수혜가 예상되나 제조업은 타격이 예상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TPP는 2032년까지 서비스업에 약 423억 달러의 생산 증가, 0.1%의 고용 증대 효과가 예상
  - 그러나 제조업·에너지업의 경우 약 108억 달러의 생산 감소, -0.2%의 고용 위축 등 피해가 예상되며, 특히 화학, 자동차부품, 섬유, 철강 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

< TPP의 미국 산업별 생산 및 고용 증감률 >

		제조업·자원 및 에너지업								서비스업
		화학	자동차부품	섬유	철강	신발	의류	자동차		
생산	(%)	-0.1	-0.3	-0.3	-0.4	-1.2	0.5	1.0	0.3	0.1
고용	(%)	-0.2	-0.3	-0.3	-0.4	-1.3	0.8	0.9	0.3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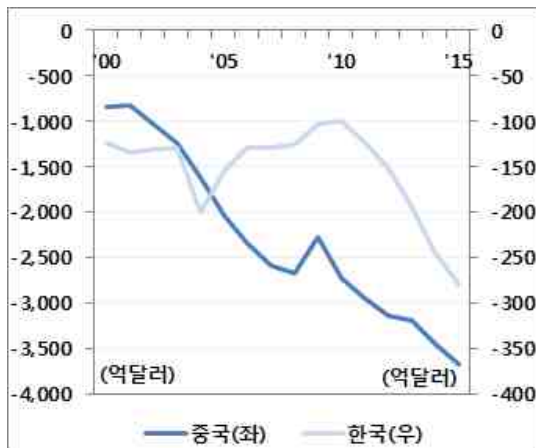
자료 : 미국국제무역위원회. 주 : 2032년까지의 영향 측정.



○ (무역적자 지속) 對중국 대규모 무역적자에 대한 비판과 이를 개선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미국 무역수지 적자 추세가 지속되며 역대 최대 수준에 근접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적자가 중국과의 무역으로부터 발생
  -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7,526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2006년 -8,373억 달러)에 근접
  - 이 중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비중이 48.2%에 달하고 있으며, 對독일 무역수지 적자 비중은 9.9%, 對일본 무역수지 적자비중은 9.2%
  - 한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적자 규모는 -280억 달러로 매해 증가하면서 對한국 무역수지 적자 비중도 약 3.7%까지 상승
-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반덤핑 관세 등을 통해 중국 등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특정 국가들을 견제
  - 미국은 2016년 2월 미 의회에서 '교역촉진법'을 발효하면서 환율 조작국에 대해 실질적 보복 조치 수단을 마련
  - 이에 따라 지난 10월 발표한 환율 조작국 지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 독일, 일본,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
  - 동시에 중국산 철강, 가전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입 규제도 확대

< 미국의 對중국, 對한국 무역수지 >



자료 : 미국 상무부.

< 환율조작국 평가 결과('16.10) >

국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GDP대비 3%초과)	환율시장 일방향 개입 (GDP대비 순매입비중 2%초과) <sup>2)</sup>
중국 <sup>3)</sup>	3561억달러	2.4%	-5.1%
한국	302억달러	7.9%	-1.8%
독일	711억달러	2.4%	-
일본	676억달러	3.7%	0.0%
대만	136억달러	14.8%	2.5%
스위스	129억달러	10.0%	9.1%

자료 : 미국 재무부.

주 : 3개 요건 모두 충족시 '심층분석국', 2개 요건 충족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2) GDP의 2%이상 달러를 순매수해 자국통화가치 하락 유도.

3) 미 재무부는 한번 관찰대상국이 된 국가의 경우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건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두 번 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기로 함.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4월 관찰대상국이 된 중국은 10월 발표에도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

○ (의료비 지출 부담) 막대한 의료비 지출이 중산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

- 미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과 제약 지출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의료비 1인당 지출은 8,713달러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스위스와 노르웨이 공공의료지출 비중이 각각 66%, 85%인데 반해 미국은 48%에 불과해 미국의 의료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
  - 또한 미국의 1인당 제약 지출은 1,026달러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의료지출 중 11.8%나 차지

○ (재정적자 확대) 정부의 공공부채와 재정적자는 다시 확대 예상

- 정부의 공공부채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줄어들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016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0년대 들어 미국의 공공부채는 10조 달러를 넘어섰고 2016년에는 14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6년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OECD 국가 중 의료 및 제약 지출 상위 5위 국가 (2013년 기준) >

(PPP달러 기준)

순위		1인당 의료지출		1인당 제약 지출
1	미국	8,713	미국	1,026
2	스위스	6,325	일본	752
3	노르웨이	5,862	그리스	721
4	네덜란드	5,131	캐나다	713
5	스웨덴	4,904	독일	678
OECD 평균		3,453		515

자료 : OECD, Health at glance 2015.

< 미국 정부 공공부채와 재정적자 >



자료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 3.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주요 공약

- (경제 정책)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그 동안 아웃소싱 및 불법체류자 유입 등에 의한 잃어버린 일자리도 되찾겠다는 공약 발표
- 경제 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 : 경제 활성화를 통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
  - 미국 경제 연평균 3.5% 성장 촉진과 잠재성장률 4%대 도달을 목표
  - 트럼프는 미국 경제 활성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2,5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 인프라 투자 : 미국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에 인프라 투자가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
  - 트럼프는 교통 체증과 지하철 운행 지연 등으로 미국인들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
  - 낙후된 도로, 공항, 수로 등 인프라 건설을 강조하고 있으며, 에너지 산업에 대한 생산규제 완화를 통한 추가세수와 민간자본을 통해 조달
  - 백악관 경제 자문위원회 보고서에서 1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시 1만 3천개의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된다는 보고서 발표

<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활성화 정책 >

정책 분야		정책 내용
경제정책	경제 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	- 향후 10년간 2,500만개의 일자리 창출 - 연평균 3.5% 성장 촉진 및 잠재성장률 4% 도달 -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 - 불법 체류자 추방을 통한 일자리 회수 - 무역 개혁 뿐만 아니라 기업의 법인세 인하, 해외 이전 제한, 해외 수익 본국으로 유입 등으로 일자리 회수 및 창출 - 최저임금제 인상
	인프라 투자	- '미국 인프라 먼저(America's Infrastructure First) 정책을 통해 교통, 상수도,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등에 대규모 투자 · 미국 경제 성장 촉진과 생산성 향상 · 유통시간 단축을 위한 물류 시스템 확보 · 인프라 건설을 통한 미국 철강 산업 살리기 · 파이프 라인 등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통해 화석연료 수출 촉진

자료 : www.donaldjtrump.com의 자료 정리.

○ (무역 및 에너지 정책) 보호무역주의 강조,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을 주장

- 무역 정책 :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며 기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시사
  -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48.2%, 8.9%(2015년)를 차지하는 중국과 멕시코에 대해 중국 최대 45%, 멕시코 최대 35%의 보복관세 부과를 주장
  - NAFTA, 한미FTA 등 미국이 기존 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하고, 만약 상대국에서 거부할 경우 협정을 철회하며, 현재 TPP 역시 반대
  - 환율조작국 지정, 불공정 행위 WTO에 제소, 재량적 무역구제수단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시사
  
- 에너지 정책 : 전통 화석 에너지 산업 강화로 미국 에너지 자립도 제고
  - 환경보호를 이유로 규제해온 전통 에너지 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약 50조 달러로 추정되는 셰일가스,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해 에너지 자립도 제고
  - 재생에너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고 언급했지만, 비용 대비 효율을 중시한다고 밝혀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 에너지 산업 일자리를 줄이는 오바마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은 모두 무효화할 것으로 주장함에 따라 키스톤 XL 송유관<sup>4)</sup> 건설은 허용되고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무효화할 것으로 예상

< 도널드 트럼프의 무역 및 에너지 정책 >

정책 분야	정책 내용
무역 정책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 미국 노동자를 위해 싸울 강력한 무역협상가 임명 - 무역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시 강화 - NAFTA, 한미FTA 등 기체결 협정 재협상, 불가능시 철회 -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 중국의 불법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WTO에 제소 - 중국의 불법행위 지속시 세이프가드, 일방적 무역보복, 안보상 수입규제 등 무역구제수단 사용 - 중국 45% 멕시코 35% 보복관세 부과
에너지 정책	- 화석연료 생산 확대로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 - 셰일가스, 천연가스 생산 규제 완화 - 재생에너지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해 사실상 반대 -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찬성 - 파리 기후변화협약 무효화

자료 : www.donaldjtrump.com의 자료 정리.

4) 키스톤 XL 송유관 : 캐나다에서 생산한 샌드오일을 미국 텍사스로 운반하는 송유관으로 오바마 정부는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고 환경파괴 문제가 우려된다고 건설을 불허함.

○ (세제, 통화 및 금융산업 정책) 세제정책은 감세, 금융산업 정책은 규제 완화가 핵심이며, 통화정책에 대한 입장은 불명확

- 세제 개편 : 소득세율 적용 간소화 및 세율 인하, 상속세 등 주요 세금 폐지, 법인세의 대폭적인 인하 등 감세 정책 중심
  - 소득세율 적용 구간을 현 7구간에서 3구간으로 간소화하고 최고세율은 39.6%에서 33%로 인하, 법인세율 역시 35%에서 15%로 인하
  - 배당 및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은 20%로 제한하고 상속세와 증여세, 오바마 케어의 재원을 위한 순투자소득세 등을 폐지
- 통화 정책 :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입장이 불명확
  - 엘런 의장이 정치적 이유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으나 저금리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현 통화정책에 대한 입장이 불명확
  - 다만 연준에 대한 회계감사원의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연준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짐<sup>5)</sup>
- 금융산업 정책 :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010년 7월 제정된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의 폐지를 주장<sup>6)</sup>

< 도널드 트럼프의 주요 세제 및 금융 산업 정책 >

정책 분야		정책 내용
세제정책	소득세	- 소득세율 적용 간소화 및 감세 : 소득세율 구간을 7구간에서 3구간 (12%, 25%, 33%)으로 조정, 최고세율 39.6%에서 33%로 인하 - 공제기준 상향 조정 : 결혼가구 3만 달러, 개인 1만 5,000달러 - 배당 및 자본이득 세율 20%로 제한 - 상속세, 증여세, 순투자소득세(3.8%) 등 폐지(순투자소득세는 소득 25만 달러 이상 가구의 투자소득에 적용)
	법인세	- 법인세율 35%에서 15%로 인하 - 법인의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납부 연기 제도 폐지 및 해외 소득의 미국 반입시 송금세 10% 부과(현재 미국 반입시 법인세율 적용)
금융산업 정책		- 금융 감독 강화를 위해 2010년 7월 제정한 Dodd-Frank Act 폐지
통화정책		- 현 엘런 의장의 교체 주장 - 미국 회계감사원에 연준의 통화정책 및 위원들의 대화 내용 등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

자료 : www.donaldjtrump.com 및 주요 보도자료 참조 정리.

5) 통화정책은 미 연준에 의해 결정이 되며 트럼프의 공식적인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사의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포함.  
6)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 : 시스템리스크 예방 대책 마련, 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신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분리한 볼커룰(Volcker Rule)이 포함되어 있는 등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각종 감독·규제책 신설 등이 주요 내용.

○ (기타 정책) 불법체류자를 배척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 및 의료 측면에서는 미국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오바마케어 폐지를 주장

- 이민 정책 :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불법 이민자 방지 및 취업비자의 엄격한 관리 등

- 트럼프의 불법이민 방지 대책은 멕시코 접경지역에 거대장벽 건설, 이민심사에서 사상검증 실시, 연방 이민세관국 산하 불법이민 추방 태스크포스 설치, 비자법 강화 등임
- 미국의 불법이민자 수는 약 1,100만 명으로 이중 멕시코인이 618만 명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음식숙박업, 건설업, 청소 등에 종사
- 하이테크·IT 기술자들에게 발급되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합법 이민 중에서도 취업이민과 취업비자를 줄이겠다는 방침

- 복지 및 의료 정책 : 보험료 인하를 통해 의료비 지출 감축

-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며 의료시스템에서 소외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는 보조금을 지급해 살인적인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
- 트럼프는 오바마케어 폐지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낮추고 건강보험 시장이 자율경쟁체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경우 약 2,500만 명의 가입자가 건강보험을 잃을 가능성

< 미국 불법이민자수 >

(만명,%)

	불법이민자수	비중
전체	1100.9만명	100%
멕시코	617.7만명	56%
과테말라	72.3만명	7%
엘살바도르	46.5만명	4%
온두라스	33.7만명	3%
중국	26.8만명	2%
기타	303.9만명	28%

자료 : Migration Policy Institute.  
주 : 2010~2014년 평균.

< 오바마케어 이후 보험미가입자수 증감 >

(%, %p)

		2013.4Q	2016.3Q	증감
전체		17.1	10.9	-6.2
인종	백인	11.9	7.1	-4.8
	흑인	20.9	11.6	-9.3
	히스패닉	38.7	27	-11.7
소득	\$36,000이하	30.7	20.1	-10.6
	\$36,000~\$89,999	11.7	9.2	-2.5
	\$90,000이상	5.8	2.9	-2.9

자료 : Gallup.  
주 : 19세 이상 성인.

#### 4.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이 집행될 경우, 현 경제 정책보다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증가율이 낮아지고, 재정적자는 확대 예상

-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은 현 정책을 유지할 때 보다 낮아질 전망

- 무디스(Moody's)는 트럼프의 경제·세제·이민 등 모든 공약이 집행될 경우, 2016~2020년까지 미국 경제는 연평균 0.6% 성장할 것으로 전망, 이는 현 정책 유지 시 2.3%보다 1.7%p 낮은 수준
- 보호무역, 이민 통제 등 고립 정책이 실행될 경우 2018년부터 미국 경기는 둔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법인세 인하로 인한 리쇼어링 유도, 이민 제한 등으로 단기적으로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는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 예상

- 트럼프 공약이 모두 이행될 경우, 고용은 2018년에 2016년 대비 450만 명 증가하겠지만, 이후 2020년에는 2016년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

-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 정책과 예상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적자는 크게 확대될 전망

- 2020년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10.2%로 현 정책유지 시 -4.2% 보다 확대될 전망

< 무디스 신용평가사의 도널드 트럼프 집권기 미국 경제 여건 전망 >

(%, 백만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16-'20)
성장률	공약 전부 실행	1.8	3.7	0.6	-1.5	0.0	0.6
	공약 일부 실행	1.8	2.4	-0.6	-0.1	0.6	0.4
	공약 실행 지연	1.8	2.8	0.8	1.8	2.2	1.5
	현 정책유지	1.8	3.0	2.7	1.9	1.6	2.3
고용	공약 전부 실행	144.4	148.4	148.9	146.1	144.0	-0.1
	현 정책유지	144.4	146.9	149.3	151.0	151.6	1.2
GDP 대비 재정수지	공약 전부 실행	-3.5	-6.0	-7.4	-9.4	-10.2	-
	현 정책유지	-3.5	-3.8	-4.0	-4.2	-4.2	-

자료 : Moody's,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Secretary Clinton's Economic Policies, 2016년 07월.

주 : 공약 실행 지연은 미국 의회와 협상 지연 정도에 따라 추정.

-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가 주장하는 강한 보호무역주의로 한국의 수출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내 인프라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인프라 시장 참여 기회 요인도 상존
  - 대선 당일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확대
    - 미국 대선 개표 결과 직후, 트럼프의 주요 공약(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따른 리스크가 반영되며 주요 아시아권 국가의 금융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확대
    - 국내 KOSPI 지수는 11월 9일 전일대비 2.5% 하락, 원화 가치는 1.1% 하락
    - 국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브렉시트 결정 당시보다 변동성은 낮음)
  -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중장기적으로 트럼프의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될 경우 불안정성이 확대될 우려 상존
    - 트럼프의 공약 현실화에 대한 시간적 제약 및 실현 가능성 등으로 유럽 및 미국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불안정성이 크게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남
    -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국 및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 역시 중장기적인 시각임을 감안한다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
    - 다만, 향후에 강한 보호무역주의 등 트럼프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가능성 상존
  - 중기적으로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확대로 對미국 인프라 시장 참여 기회는 제한적이지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경제 활성화 정책 시행은 미국의 경제 회복세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트럼프는 인프라 투자 확대 시 자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한국 등 외국 기업의 참여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음
    - 감세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야 하며 이는 금리 상승 및 달러화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의 對미국 인프라 시장 참여 기회 확대 및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상승으로 인한 對미국 수출 증가로 한국의 경제 성장세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8)

7) 브렉시트 및 트럼프 당선 전후의 주요국 증시 및 통화가치 변동은 [별첨] 참조.

8) 미국 경제 성장률이 1%p 증가할 경우, 한국의 수출은 2.1%p, 경제 성장률은 0.4%p 상승할 전망(자료 : 홍준표, 「미국경기 회복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14-04호, 2014.01.22).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미국에 대한 직간접 수출이 둔화되고 한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對한국 보호무역 조치는 누적기준, 2000~2008년 2,573건에서 2009~2016년 2,797건으로 증가<sup>9)</sup>
  -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주장한 트럼프의 공약이 이행될 경우, 미-중간 보호무역 기조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큼
  -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할 경우, 한국의 對미국 직접 수출 및 중국을 통한 對미국 간접 수출 모두 둔화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당선자는 보호무역 강화를 통한 자국의 수출 개선을 목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달러화 강세보다는 약세를 원할 것이며, 이는 한국의 수출 상품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트럼프 공약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에 의문점이 있으며, 공약 이행 정도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sup>10)</sup>

<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대선 공약	미국 경제 파급 영향	한국 경제 파급 영향	종합평가
일자리 창출	- 인프라 부문 일자리 창출	- 미국의 소비재, 자본재 수요 증가로 한국의 수출 증가	+
인프라 투자	- 단기적으로 경제 활성화	- 미국의 정부조달시장 참여 기회의 제한적 확대	▲
통상 정책	- 보호무역주의 강화 - 중국 견제 - 달러화 약세 용인	- 통상 마찰 증가 - 한국의 對美 직접 수출, 우회수출 경로 모두 부정적 - 달러 대비 원화 강세에 따르는 수출 경쟁력 악화	-
에너지 정책	- 유가 상승세 완화 혹은 하락 - 미국 우선주의로 중동 산유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용인	- 경상수지 흑자세 지속 - 유가(변동성) 리스크 확대	▲
세제 개편	- 산업경쟁력 강화	- 산업 경쟁구조 심화 - 국내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 위협 가능성 상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는 긍정적, -는 부정적, ▲는 중립적 의미를 의미.

9) 한재찬·천용찬. 「美중의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통권 714호, 2016.10.14.

10) 자유무역의 혜택을 입었던 미국이 트럼프의 공약대로 강한 보호무역주의를 현실화할 경우 자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바, 미국 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강도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음.

## 5. 시사점

- 단기적으로 미국의 성장세 확대를 기회로 활용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미국과의 통상 마찰 대비,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이 필요

첫째,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와 수요확대에 대비하여 미국 시장에 보다 적극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미국 경제는 올해보다 2017년에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이 예상
  - 트럼프가 내건 공약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진다면 장기적으로 경기 둔화 등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일자리 창출 및 규제 완화 정책 등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
- 對美 수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이를 국내 수출 경기 회복의 동력으로 삼아야 함
  - 인프라 투자, 에너지 산업 강화 등으로 관련 상품의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
  - 미국의 내수회복과 최종재에 대한 수요 확대에 대비하고 경쟁국의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품질 경쟁력 향상을 통해 미국 시장 점유율을 늘릴 필요
- 관련 제품 수출뿐만 아니라 서비스 패키지를 활용한 '융합형 수출 품목'을 개발하여 미국 시장 공략과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
  - 예를 들어, 건설기기 수출시 수출 품목 이외에도 유지 및 보수 등의 서비스까지 수출하여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

둘째,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 확대에 대비하고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하다.

- 미국 제조업의 회복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미국 주요 기업들의 제조업 리쇼어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미국 제조업의 리쇼어링이 단지 기업들의 인건비나 물류비 절약 차원을 넘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
-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국내 기업들과 경쟁이 치열해 질 것에 대비
  - 산업간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경쟁 우위 요소 점검,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마련 등 국내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
-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심리를 조속히 회복시켜야 함
  - 기업들이 글로벌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투자여건 개선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내의 투자여건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

셋째, 미국과의 통상 마찰 리스크 및 한미FTA 재검토·재협상에 대비하여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 점차 증가할 통상 마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무역 분쟁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규제 예상 품목을 별도 관리 전략이 필요
  -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품질 기준 조건을 국제적인 요구 조건에 맞추는 등 자체 검열 시스템이 필요
  - 중장기적으로 불공정한 보호무역에 대처하기 위해 WTO, FTA 이행위원회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의견 조율 및 해소 노력이 필요
- 통상 마찰로 인해 국내 수출 품목의 브랜드 가치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업 자체의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
  - 기업차원에서 미국의 규제 조치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통상 관련 인력 확충, 수출 유관기관들과 정보 공유 등의 대응 방안 마련
- 미·중간 무역 마찰 심화로 우회 수출에 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중간재 수출 시장의 다변화 전략이 필요

- 한미FTA 재검토와 재협상 요구에 대한 대비 필요
  - 한미간 FTA로 인해 양국간 이익의 불균형이 아직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미국내 일자리 감소와 제조업의 해외유출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한미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
  - 자동차, 전자, 기계 등 FTA 재협상 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대응책 마련이 필요
  
- 미국의 환율조작국 대상에 오를 가능성에 대비
  - 우리나라는 對미국 무역흑자 규모가 큰 중국과 일본, 독일, 대만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명단에 포함되어 있음
  - 외환-통상 연계 분야에 대한 총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여러 정책부처 간의 공조체계가 요구되며, 특히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함

넷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
  - 트럼프 당선 이후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 가능성과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는 등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
  -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
  -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 등 외환시장의 급변동에 따른 중소기업의 리스크 확대에 대비
  
- 외환시장 및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들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
  - 향후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규모·지속적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우량 기업 발굴 및 상장 유도, 공시제도의 신뢰성 제고 등 주식시장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 원/달러 환율 급등락 및 변동성 확대를 대비하기 위해 환리스크에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환변동보험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환관리기법에 대한 컨설팅 지원
- 금리 상승 시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는 가계부채, 부실기업 등의 취약 요인들에 대한 장단기 대책이 필요 **HRI**

홍준표 연구 위원 외 (2072-6214, jphong@hri.co.kr)

[별첨]. 브렉시트 및 트럼프 당선 전후 주요국 증시 및 통화가치 변동

구분		등락률	
		브렉시트 (6.23~6.24)	트럼프 당선 (11.8~11.9)
증시	일본 토PIX지수	-7.3%	-4.4%
	중국 상하이 지수	-1.3%	-0.6%
	홍콩 항셱지수	-2.9%	-2.2%
	인도 센섹스지수	-2.2%	-1.2%
	멕시코 볼사지수	-2.7%	-3.7%
	한국 코스피지수	-3.1%	-2.5%
	미국 S&P500지수	-3.6%	1.1%
	독일 DAX지수	-6.8%	1.6%
	프랑스 CAC지수	-8.0%	1.5%
	영국 FTSE100지수	-3.1%	1.0%
통화 가치	일본 엔화	3.9%	2.9%
	중국 위안화	-0.2%	0.0%
	홍콩 달러화	0.0%	0.0%
	인도 루피화	-1.1%	0.3%
	멕시코 페소화	-2.2%	-7.7%
	한국 원화	-2.4%	-1.1%
	미국 달러화	1.7%	NA
	유로화	-2.4%	-1.1%
	영국 파운드화	-8.2%	0.2%

자료 : Bloomberg.